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한다”

여수 국동항서 어업인 100명 “수산업 지키다” 한목소리 집회 이어 연·근해 어선 150여 척 해상퍼레이드 전개도



19일 전남 여수시 국동항에서 펼쳐진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일본 규탄 대회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어업인들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을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시위 하고 있다.

전통적인 수산업 도시를 지켜온 전남 여수 어민들이 19일 한자리에 모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비난 수위를 높였다. 여수수산업협회, 수산경영인협회 등 어민단체 100여 명은 19일 여수시

국동항 수변공원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어민들의 집회에 이어 150여 척의 연안 어선들은 여수 바다 위에서 해상 퍼레이드를 펼치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권오봉 여수시장도 어업인들의 규탄 대회에 참석해 우리 바다와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어업인들에게 힘을 실었다.

이날 여수 지역 어민들은 국동항 수변공원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노평우 수산인협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나라 등 인접국과 다시 협의하라”면서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해양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바다와 한 몸이 되어 살아오신 우리 여수지역 수산인 여러분

께서 바다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서주신 데 대해 지지와 감사를 보낸다”면서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강한 우려와 반대에도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뜻을 같이했다.

이어 “일본 수산물에 우리 지역 수산물과 절대 섞이지 않도록 원산지 단속을 철저히 이행할 것”과 “해양자원과 해양관광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전남도, 인근 지자체와 함께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어업인들은 육상 규탄대회와 더불어 국동 수변공원에서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를 거쳐 돌산읍 월전에 이르는 해상에서 연·근해 어선 150여 척을 동원해 오염수 방류 반대 해상퍼레이드를 전개하면서 항의 수위를 높였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16일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소속 9개 시·군 지자체장과 함께 일본 정부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과 주 부산 일본국 총영사관으로 보내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다.

여수=오상호 기자

광주 남부소방, 폐기물 관련시설 유관기관 합동 점검

광주 남부소방서는 관내 폐기물 관련시설에 대하여 유관기관(남구청,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현장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폐기물 관련시설의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폐기물 화재는 진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소방대원이 폭발이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오염물질 발생으로 2차 피해를 불러오는 경우도 많아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주요 내용은 ▲관내 5곳 폐기물 관련시설 유지관리 실태조사 ▲관계인의 화재 경각심 고취 ▲소방활동 정보 등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발굴하고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힘을 기울인다.

김행모 예방안전과장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폐기물 관련시설은 화재안전 분야에 취약하다”며 “현장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예방대책을 강화해 화재예방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최윤희 기자

영암소방,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알려

영암소방서(서장 임동현)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및 강력한 단속 활동에 임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지난 2010년 4월 처음 시행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는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를 막고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고포상제도는 지속된 개선과정을 거쳐 도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고 할 수 있으며 기존 신고 대상에 다중이용시설이 추가되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됨으로써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광양소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인증제 실시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원활한 보급과 유지·관리를 위해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보급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보급 인증이란 취약계층에 기초소방시설 보급 시 현관 입구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보급가구 현황 관리 및 소방시설 교체주기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로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에 의무 설치해야하는 기초소방시설이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재난취약가구에 지속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인증표시를 부착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와 주택용 소방시설 필요성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양=심종섭 기자

보성경찰, 2021년제 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보성경찰서(총경 박임규)는 16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경찰서장,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 1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무분별한 전과자 양성을 억제하고 계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피해가 경미하고 점유이탈물회령 형사범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을 반환한 점, 피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사입건 사건을 즉결심판으로 감경 결정하였다.

보성=김덕순 기자

‘동물 n번방’ 충격...개·고양이 업종사살후 채팅방 자랑

동물보호법·야생생물 보호법률 위반 혐의

지난 1월 시민단체 ‘동물판 n번방’ 고발장

경찰, 80여명 참고인 조사...3명 검찰 송치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영상·사진 등을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한 참가자 일부가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9일 동물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후반의 남성 이씨를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씨는 업종으로 개, 고양이, 너구리 등을 잔혹하게 죽이고 그 사진을 채팅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동물판 n번방’으로 불리

는 ‘고어전문방’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참여자 80여명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한 결과,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검찰에 함께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모두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전해됐다.

앞서 시민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월8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참여자들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사태는 ‘동

물판 n번방 사건’에 다음 아닌 심각한 사안”이라며 엄벌을 요청했고, 당시 국민청원으로도 올라오면서 국민적 공분을 얻게 했다.

이 단체가 제공한 채팅방 대화 일부 이용자는 고양이에게 화살을 쏘 잡은 뒤 피 흘리는 모습을 찍어 공유하고, 고양이의 머리로 추정되는 물체 사진을 채팅방에 올리기도 했다.

채팅방에서는 ‘길고양이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익사시키는 것 대리만족된다’는 취지의 대화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기동취재본부

버스서 음란행위 40대,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2심도 실행

고속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

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은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게 내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

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15분 동안 전남 한 지역 고속버스 안에서 복도 쪽으로 버스

등히 몸을 돌려 대각선 앞쪽에 앉아 있던 여성 청소년을 바라보면서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항소심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